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3936 청구이의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03. 4. 24. 작성의 2003년 증서 제○
○○○○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37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5. 3. 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1년경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E'이라는 대부업체(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고 한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 수차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F와 동업으로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2003. 4.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03년 증서 제○○○○○호로, 원고 A가 자신의 피고에 대한 2002. 10. 23.자 대여금 채무가 2003. 4. 24. 현재 9,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03. 4. 23.까지 전액 변제하며, 원고 B가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하지 못한 채 2005. 8. 2. 이 사건 대부업체에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위의 위임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최종 이자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대부업체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3. 4. 23.이므로, 피고가 원고 A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2005. 8. 2.부터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8. 3.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12. 10.경 채권금액 조정을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채무승인을 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등 참조).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가 피고 주장 일시에 그 잔존 채무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시효 완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